「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2호(2025. 8): 459-488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9 No.2 (August 2025)
http://dx.doi.org/10.20484/klog.29.2.19

청년 관점에서 접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백 종 선

국문요약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청년 관점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들간의 결합적 인과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은 지역의 청년인구비율로 나타났으며, 충분조건을 구성하는 원인집합은 높은 수준의 청년인구 비중 및 청년실업률, 청년인구 순유입률, 낮은 수준의 1인당 청년정책 예산 규모 및 청년정책 사업수, 청년혼인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인구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평가의 필요성,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년정책 분야에 혼인·출산 분야를 추가하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지방소멸, 소멸위험지수, 청년, 퍼지셋분석, 지방자치단체

Ⅰ. 서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역 간의 인구 불균형, 지방인구의 사회적 감소 심화는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적 인프라로 인해 지방인구가 일자리와 교육 등의 기회를 찾아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거주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수요 부족과 구매력 하락, 소비와 생산 관련 요인들의 쇠퇴가 나타나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방의 소멸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33개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229개 시군구의 57.2% 수준인 131개 자치단체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1)]

1)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229개 기초자치

지방소멸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제시한 개념으로,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자족기능 상실로 해당 지역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마스다, 2014). 이러한 지방소멸은 지방의 쇠락이나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 차원의 인구 문제와 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의 침체는 인구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지방을 소멸시키고,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은 경쟁의 심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의 해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총인구 규모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의 인구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간 인구의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이동이라 할 수 있다(이상림 외, 2018).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인구감소는 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발생하며, 결국 인구유출이 지방의 인구감소 및 쇠락을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경·김도형, 2020; 이상림 외, 201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보다 인구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이석환, 2024).

이처럼 인구유출이 지역의 인구감소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의 유출, 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인구의 유출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지역 산업의 침체, 소비 저하,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 이탈,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박진경·김도형, 2020).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이동은 지방소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김준영, 2019; 이상림 외, 2018; 이상호·이나경, 2023; 임소현·장우윤·이태천, 2024; 최예술, 2022),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 순이동률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림 외, 2018; 이상호·이나경, 2023; 최예술, 2022). 이상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지방의 소멸위기는 저출산·고령화, 지방균형발전 측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인구의 이탈을 줄이고, 이들의 성장잠재력,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 자족기능의 복원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청년세대와 관련된 요인의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소멸에 있어 청년인구의 이동과 정착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에 있어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청년인구의 이탈원인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시도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

단체 가운데 절반을 넘는 131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년인구의 이탈과 정착은 일자리와 임금, 취업 가능성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주거와 문화, 환경 등 사회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동신·허성욱, 2023; 김정식·임예린·허형조, 2023; 이석환, 2024; 이찬영·이홍후, 2016).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소멸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과 인과관계 분석에 강점을 가지는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들 간의 다양한 조합을 확인하고, 결합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소멸

1)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

지방소멸은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가 제시한 개념으로,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며,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극점사회를 유발하여 지방의 과소지역화 또는 무거주화에 따른 자족기능 상실로 결국 해당 지역이 쇠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상호, 2014; 정성호·홍창수, 2018; 정영철, 2024). 지방소멸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인구감소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유지 자체가 우려되는 지역(김현호·박진경, 2019), 단순히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인구감소대책이 시급한 지역(박진경 외, 2019) 등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2항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지방소멸을 연구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요인 가운데 핵심은 지역의 인구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감소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생아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감소, 지역의 인구유출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인구감소의 경우 국가의 총인구 규모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인구 이탈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이상림, 2018). 이러한 측면에 본다면 결국 인구유출이 지방의 인구감소 및 쇠락을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진경·김도형, 2020; 이상림, 2018). 이러한 인구이동, 유출과 관련하여 과거 Ravenstein(1885)의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필두로, 소득 관점에서 인구의 이동을 설명하는 신고전학파경제모형(neo-classical economic

theory)(Harris & Todaro, 1970; Lewis, 1954; Todaro, 1969; 이석환, 2024),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을 원인으로 제시한 Tiebout(1956)의 모형, 유출지(origin)와 유입지(destination) 간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출-흡입모형(push-pull model)(Lee, 1966)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구이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의 관점에서 인구의 유출·이탈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크게 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진경·김도형, 2020; 이상림, 2018). 일자리 감소, 지역의 생산 및 소비 감소, 그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 등은 경제적 측면의 이탈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 및 생활 인프라 부족과 교육 및 양육 여건 악화, 그에 따른 지역 사회의 활력 감퇴는 사회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림, 2018). 지방소멸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서도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쇠퇴, 산업구조 변화, 거주체계 변화, 정치·경제적 체제 변동, 환경오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Hollander, et al. 2009; Pallagst, et al. 2013; Wiechmann & Wolff, 2013).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의 전출입과 관련해서는 기대소득, 일자리, 연령, 성별, 지역 인구 수준 및 구조, 주택 가격, 지역 간 거리, 고용률, 지방세, 지역의 발달 단계 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Fu & Gabriel, 2012; Todaro, 1980; 홍기석·윤태영,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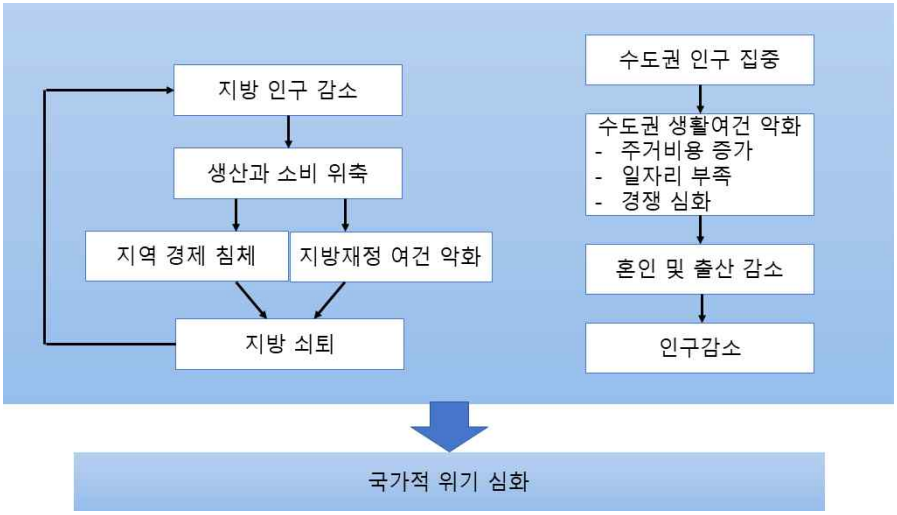
지방소멸의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출생아수 감소와 고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지방 인구감소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이석환, 2024). 지역산업의 쇠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적 인프라 등으로 인해 일자리와 교육 등의 기회를 찾아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소비와 생산 관련 요인들이 모두 쇠퇴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약화, 재정지출 감소로 더 많은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정영철, 2024; 조임곤, 2020).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농어촌 지역에서 권역의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해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지역진흥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박병식·이동기, 2023), 최근에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인 지방소멸위험지수[2)]에 따르면 0.2~0.5면 '소멸위험',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

2)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이상호(2015)가 마스다의 정의를 활용하여 제시한 지수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지수가 낮으면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사라질 가능성, 즉 지방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소멸위험지수가 1.0 미만이면 해당 지역은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수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소멸의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이상호, 2018).

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2024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이며, 전남(0.349), 경북(0.346), 강원(0.388), 전북(0.394), 경남(0.444), 충남(0.464), 충북(0.487), 부산(0.490) 등 8개 자치단체가 소멸위험단계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림 1〉 지방소멸의 단계와 파급효과



출처: Elis(2008), 김현호 외(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국·내외에서 '청년'을 규정하는 단일한 기준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년의 범위 및 정의는 법적 기준,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최하예, 황성수, 2018; 정호용, 2020). 해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는 청년을 15~24세로, 유럽연합(EU)의 경우 15~2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도 다소 상이한 청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인구총조사[3]에서 20~34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으며, 영국 통계청은 16~24세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하는 청년 관련 정책에서 대부분 청년을 15~39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청년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에 따라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15~29세까지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두 법률 모두 예외조항을 통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15~2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3) 캐나다 연방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는 5년 주기로 인구총조사(Census of Population)를 실시

청년 관련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서울과 울산, 세종, 경기도는 15~34세, 충북과 경북은 15~39세, 부산과 강원, 충남은 18~34세, 전북과 전남은 18~39세, 경남과 제주는 19~34세,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은 19~39세로 청년의 연령을 정의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총인구의 규모와 전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지역의 인구증감에는 지역 인구의 유입과 유출에 의한 인구이동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지역의 인구감소는 본질적으로 인구유출에 의해 발생하며, 인구유출은 지방의 인구감소, 나아가 지방소멸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박진경 외, 2019; 이상림, 2018).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적인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청년인구의 유출, 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변 대도시로의 이동하는 것은 더 많은 기회, 양질의 인프라를 누리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광역시로 유출되는 현상은 단순히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측면에서 핵심 인적자원의 유출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지역 산업의 침체, 소비 저하,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다시 지역의 인구 이탈,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박진경·김도형, 2020).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을 이탈한 청년인구가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인구 과밀화와 한정된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활환경의 악화, 일자리와 주거 문제, 그에 따른 혼인과 출산 감소[4]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한국은행, 2023). 감사원 보고서[5]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소멸위험을 측정하는 지수 측면에서 보더라도 청년인구의 유출은 출산연령기 청년의 규모를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지역 차원의 출산력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즉 가임연령 내의 젊은 여성인구의 비율을 통해 측정되는데, 해당 연령대의 여성인구가 유출됨에 따라 소멸위험지수도 더욱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은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기준으로 정상지역은 12.3%의 순유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소멸주의단계에 처한 지역은 1.5%, 소멸위험진입지역 -12.7%, 소멸고위험지역 -27.3%로, 소멸위험진입지역과 소멸고위험지역은 청년인구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호·이나경, 2023).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청년인구의 이탈과 지역소멸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2010년~2020년까지의 기간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평균 순유입률은 -0.54%를 기록하였으나, 청년인구의 평균

4) 정민수 외(202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에 따른 국가 차원의 출산 손실이 2021년을 기준으로 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감사원.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서울: 감사원.

순유입률은 −4.3%에 이르는 등 타 연령에 비해 청년들의 이탈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최예술, 2022).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청년인구의 이탈,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4년 기준 총 1,832개의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1,476개로, 매년 발표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기반하여 일자리, 복지·문화, 주거, 교육, 참여·권리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2024년 기준 정부 수행 청년정책 수

(단위: 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계
중앙정부		124	28	117	44	43	356
지자체		530	144	303	316	183	1,476
	서울	17	7	9	14	10	57
	부산	27	11	31	16	13	98
	대구	13	11	25	21	6	76
	인천	30	7	21	18	6	82
	광주	32	8	21	18	7	86
	대전	21	7	8	18	12	66
	울산	17	17	16	16	14	80
	세종	18	9	14	25	9	75
	경기	15	5	10	12	12	54
	강원	18	3	10	10	4	45
	충북	37	7	18	14	11	87
	충남	45	12	22	30	14	123
	전북	33	7	12	24	9	85
	전남	38	6	21	14	10	89
	경북	73	6	32	25	16	152
	경남	57	12	15	23	17	124
	제주	39	9	18	18	13	97
총계		654	172	420	360	226	1,832

출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3) 선행연구

이상호(2016)의 연구는 국내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약 35%에 해당되는 79개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결과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기 지방소멸 관련 연구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개념을 소개하고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활용하여 국내 여러 지역의 소멸위험 수준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박상헌 외(2017)는 강원도의 인구 유출 및 감소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보는 한편, 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각 지역별 위험수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성호(2019)의 연구도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변화 특성과 장래인구 전망을 실시하는 한편, 소멸위험지수에 따른 강원도 18개 시군의 소멸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김경근·이현우(2017)는 대전·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소멸위험 수준과 소멸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호(2018)는 기존 연구를 확장하여 읍·면·동 단위까지 지방소멸위험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2018년 6월 기준 소멸위험에 해당되는 읍·면·동은 전체 지역의 43.3%로, 지역 단위가 작아질수록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이동의 특징을 확인하였는데, 고용위기 지역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나타나지만, 혁신도시 지역은 인근 지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 외에도 통계적 지표와 방법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김대성·신동훈(2016)은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추계와 함께 인구감소, 가임여성변화율, 고령화율을 토대로 소멸예상지역을 추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형수 외(2018)는 지방소멸 실태를 분석하고,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일자리-공간' 분야가 연계된 범부처 차원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멸위험지역을 유형화하는 한편, 분석을 통해 고용률, 인접 대도시까지의 거리, 인접 지역 평균 고용률 등이 소멸위험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서현·홍성진(2019)은 소멸위기 지방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보 관련 연구에서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교통공급 수준을 통해 소멸위기 심각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멸위기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고문익·김걸(2021)은 인구, 경제, 물리, 복지의 4가지 분야로 변수를 구분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사회적 증감률, 자연적 증감률, 출생률, 독거노인가구 비율, 지역내총생산액, 재정자립도, 빈집 비율 등이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별 외(2021)는 지역의 매력도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평균연령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 경제·산업적 요인, 문화 및 의료시설 등의 요인들이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태호·엄태호(2022)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고등교육재정지원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의효과모형과 Pooled OLS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멸위험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고등교육재정지원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경(2022)은 청년인구 유출이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분야별 재정 지출이 청년인구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제개발비 및 사회복지비 세출액은 청년인구의 순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행정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철·오창석·정경훈(2023)는 지방소멸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전출입을 고려해 수정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와 광역 지역 단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소득, 일자리, 교육 접근성, 교통 인프라 관련 변수들이 전국 단위의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 단위에서는 1인당 소득과 일자리, 교육 관련 변수들이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교통 및 의료 관련 접근성의 개선은 일부 지역 단위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식·임예린·허형조(2023)는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자연적 유입의 경우 경제성장률, 재정자주도, 20대 고용률이 인구 증가를 유도하며, 사회적 유입 측면에서는 세대별로 인구구조의 변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비중'과 '의료복지시설 수'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멸위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이석환(2024)의 연구에서도 소득,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는 흡입(pull)요인, 일자리는 전출 억제요인으로 작용하며, 각 세대별로 20~30대는 소득과 일자리, 40~50대는 소득, 일자리, 의료서비스, 60세 이상은 소득,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가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의 관점에서 지방소멸 혹은 지역의 인구유출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청년의 지역 간 이동, 지역에서의 이탈 혹은 유출의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하는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일자리를 비롯하여 임금이나 기대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문화적 요인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년인구의 유출 실태와 수도권 집중현상과 관련하여, 김준영(2019)은 1984~1993년 출생자의 연령대별 지역 간 이동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찬영·문제철(2016)은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이동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인구유출은 주로 20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의 경우 고용 여건, 일자리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강민규(2023)는 개인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 청년세대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우수한 청년 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장 및 고용 관련 변수가 개인적, 지역적 수준 모두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경·김도형(2020)은 지역인구감소의 핵심요인이 청년인구의 유출에 있다는 판단하에 통계청의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 인구동향조사, 국내 인구이동통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유출 현황과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차건환·임수하(2023)는 충분한 규모의 사업체, 제조업 기반의 산업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임태경(2022)은 청년인구 유출이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분야별 재정 지출이 청년인구의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제개발비 및 사회복지비 세출액은 청년인구의 순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행정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경(2024)은 또 다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지역이동을 결정하는 세부 동기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취업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

로 강하게 나타나는 20대에게는 일자리의 양적 규모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30대의 경우 1인당 급여 수준과 같은 일자리의 질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찬영·이홍후(2016)는 청년인구의 시·도간 이동에 있어 임금과 거주비용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그 외에 결혼 기회, 문화, 환경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찬영(2018)은 2004~2016년을 시간적 범위로 하여 16개 시·도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20대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요인은 일자리에 있으며, 30대의 경우 주거비용과 문화기반시설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욱·권철우·임영주(2019)는 울산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주지역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울산지역 청년들은 쇼핑시설, 대학교육 기회, 초등교육 여건이 확보된 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상승률도 지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우(2019)는 2014~2015년을 기준으로, 20~34세 청년층의 지역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기대임금이며, 영향력은 학력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4년제 대졸 이상)에 해당되는 청년층에서 주거비용과 문화시설도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지은·이경은(2020)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청년 집단의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년에게 있어 지방의 청년정책과 생활인프라가 지방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화연·이대웅(2022) 연구에서는 경제·일자리 여건, 보건·의료 여건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자연환경 인프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신·허성욱(2023)은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건강·보건 요인, 행정적 요인이 지역 청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에 대한 자긍심, 의료서비스와 민원서비스,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임태경(2024)의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30대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 외에 문화 및 여가 시설의 존재가 지역 이동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김화연·이대웅(2022) 연구에서 지역의 청년정책이 지방 정주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선·이정은(2022)은 광주광역시 청년인구를 대상으로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정책의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이주 의향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강유미(2022)는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1인당 복지지출 비용, 청년정책 부서 유무, 청년지원조례 제정 유무가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는데, 청년 1인당 복지지출 비용과 청년지원조례 제정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담당부서의 존재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청년인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소멸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또는 이탈에 있어 일자리나 소득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비롯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세대의 이동은 단순히 특정 요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있어 청년세대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방법

1. 연구방법론: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본 연구는 국내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지자체의 지방소멸위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청년세대 관련 요인들의 결합조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정된 소수사례를 통해서도 인과성 검토의 수행이 가능한 퍼지셋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서인석·이유현·주희진, 2021).

일반적인 양적연구는 연구 대상의 내생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반면, 사례 중심의 연구들은 사례가 가진 특성들의 조합, 배열(configuration)에 집중하며, 각 변수 간의 관계나 복합성을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례의 특성(또는 원인) 간 배열과 관계에 주목하여 체제 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례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기도 한다(서인석·이유현·주희진, 2021).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은 사례 중심의 질적연구와 변수 중심의 양적연구를 결합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소수 또는 중범위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는 인과관계의 보편성 및 타당성 측면의 한계와 일반적인 통계분석이 현상 내에 존재하는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표면적 인과관계의 확인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서인석 외, 2021). 이를 위해 집합이론(set theoretic)을 반영하여 질적 개념의 계량화를 통해 비교분석을 시도하는데(이승윤, 2014), 특정 원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에 더해 사례 내 요인 간의 결합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인과적 복잡성(causal complexity)을 규명하고자 한다(Ragin, 2008; 이승윤, 2014; 이승윤·강민아·정무권, 2015). 원인변수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는 한편, 원인변수가 결과변수에 대해 가지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는다(서인석 외, 2021; 이승윤, 2014). 기존 양적연구에서 수행하는 분석은 인과관계에 있어 원인과 결과가 완벽히 대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특성상 그렇지 못

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원인이 정치·경제적 변수, 사회·문화적 변수 등과 결합하여 다양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준, 2009). 그러나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필요조건 또는 충분조건으로 정의하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은 이러한 문제의 극복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방법론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해당 방법론을 통해 각 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결합된 원인(combinational causes)'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원자료를 퍼지점수로 환산하는 과정으로, 주요 변수들의 원점수를 퍼지셋 눈금매기기(calibration)를 통해 0과 1 사이의 퍼지점수 변환이 이루어진다. 이때 퍼지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 1에 가까울수록 완전히 소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0.5는 분기점으로 소속과 비소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Ragin, 2008). 이러한 퍼지점수의 변환에 있어 소속의 정도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데, 소속점수를 3분위, 5분위, 7분위 등의 비율로 구분하는 방법, 0부터 1까지의 값을 연속점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연속 퍼지점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민기채, 2014; 성연주, 2022).

이후에는 퍼지 부분집합(Fuzzy subset)을 통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결합요인과 결과조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최영준, 2009). 이때,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은 진리표(truth table)를 통해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진리표는 인과적 조건에 있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결합과 그 결합에 의한 결과들을 목록으로 나타낸 것으로, 인과적 조건들의 결합과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에서는 인과적 결합과 관련하여 일관성(consistency)과 설명력(coverage)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일관성은 원인변수들이 결과조건의 충분조건을 만족하는 정도로, 0.8 이상이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명력은 원인변수들이 결과조건의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agin, 2004; 민기채, 2014).

한편, 본 연구는 Fs/QCA 프로그램과 함께 STATA Fuzzy 모듈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해당 모듈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확인에 있어 F-test를 통한 F값 및 유의확률의 제공을 통해 모델에 대한 검증을 용이하게 하며, 이를 통해 Y-일관성(Y-consistency)과 N-일관성(N-consistency)에 대한 동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민기채, 2014; 전영준·엄태호, 2018). 이때 Y-일관성 검증은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수준기표(benchmark proportion)를 사전에 설정하고 비교하여 해당 모델과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고, N-일관성 검증은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일관성과 원인집합이 결과 여집합의 하위집합이 되는 일관성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김규환·박인권, 2018).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검증에 있어 Y-일관성에 대한 검증만 실시하기보다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검증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판단하였다(민기채, 2014; 전영

준·엄태호, 2018).

2. 변수의 설정

본 연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청년세대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국무조정실 온통청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수 값을 측정하였다.

우선 결과변수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지수로 설정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방소멸의 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장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산업 구조의 개편 등으로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지역의 소멸위험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지방소멸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지방소멸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지역의 소멸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있으며(김경근·이현우, 2017; 박상헌 외, 2017; 윤복상·김걸, 2022; 이상호, 2018; 정성호, 2019; 주상현, 2021), 지방소멸의 위험과 지역의 산업, 의료, 교육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배선학, 2022; 이명애, 2023; 이현지 외,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과변수인 지방소멸위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인구비율, 청년실업률,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 청년정책수, 청년혼인률, 청년인구순유입률로 원인변수를 설정하였다.

청년인구비율은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 가운데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지역의 청년 이탈·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준영, 2019; 박진경·김도형, 2020;이상림 외, 2018; 이석환, 2024; 임소현 외, 2024; 임태경, 2022). 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을 판단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경우도 고령인구 대비 청년세대에 해당되는 여성인구의 비율을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년인구가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해당 요인을 변수에 포함하였으며, 지역 간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해당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변수의 값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청년실업률은 전반적인 고용동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15세에서 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측정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을 원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는 미취업 등으로 실제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고용·노동시장의 단기적 변화와 구직의 어려움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업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다(통계청, 2015).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률이 청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이탈을 막기 위해 일자리, 복지·문화, 주거, 교육, 참여·권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선행연구(김화연·이대웅, 2022; 최선·이정은, 2022)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청년들의 이탈을 막는데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과 청년정책수를 변수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은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인구 대비 청년정책예산으로 측정된다.[6] 예산은 일정 기간(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국가 수입과 지출을 계획한 것으로, 정부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국민의 다양한 재정수요 및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정책예산은 청년인구의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발전, 지원 등을 목적으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청년정책수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복지·문화, 주거,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대해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개별사업들의 합으로, '24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은 총 1,476개, 자치단체별로 평균 약 87개의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규모는 예산이나 인구 등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청년정책의 경우 청년인구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가 청년정책수는 최하위 수준이며, 청년정책예산 규모가 가장 큰 서울이 청년정책수에서는 최하위 수준[7]을 기록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방소멸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변수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청년혼인율은 청년세대의 조혼인율을 측정한 것으로, 조혼인율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년혼인율은 '23년 혼인[8]에 대한 통계를 기반으로, 청년세대에 해당되는 연령(20세~39세) 구간의 조혼인율을 측정하였다. 혼인율의 경우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혼인 감소와 그에 따른 저출산은 결국 지방소멸·인구소멸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순유입률은 지역인구의 이동현황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활성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인구순유입률은 지역의 청년인구 이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이 청년인구의 유출이나 이탈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청년인구의 이동과 지방소멸 간에 나타나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전입(Inmigration)과 전출(Outmigration)로 구분되는

6) 청년정책예산은 2024년 4월에 발표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금액이며, 광역자치단체 청년인구는 2024년 3분기 기준 청년인구수로 설정하였다.

7) 2024년 3분기 기준 청년인구는 경기도가 2,747,748명, 서울이 2,194,577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으나, 청년정책수는 경기도가 54개, 서울이 57개로, 45개의 강원도 다음으로 적은 수를 기록하였다.

8) 통계청은 1년 주기의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24년 3월에 발표한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통계』를 참고하였다.

데, 전입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 온 경우를 의미하며, 전출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간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특정 지역의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경우를 인구의 순유입이라고 한다. 전입률은 지역의 연앙인구 대비 전입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며, 전출률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연앙인구 대비 전출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순이동률은 지역의 연앙인구 대비 순이동자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전입률과 전출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변수의 구성

	변수명	측정방법 (1)	출처
결과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Local Extinction Risk Index)	20~39세 여성인구 / 65세 이상 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원인변수	청년인구비율 (Youth Population Ratio (to Total Population))	(청년인구 / 총인구)*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실업률 (Youth Unemployment Rate)	(15~29세 실업자수 / 15~29세 경제활동인구)*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공공데이터포털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 (Youth Policy Budget per Capita)	청년정책예산총액 / 청년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4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온통청년)
	청년정책수 (Number of Youth Policy Program)	각 분야별 청년정책 총합	2024년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온통청년)
	청년혼인률 (Youth Marriage Rate)	20세~39세 조혼인율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청년인구순유입률 (Net Inflow Rate of Youth Population)	청년전입률 (2) –청년전출률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자체별 청년통계

(1) 청년의 기준은 20~39세로 설정하였으나, 청년실업률은 통계청의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2) 청년전입률=(청년전입자수/청년연앙인구)*100
(3) 청년전출률=)청년전출자수/청년연앙인구)*100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이 결과변수 지방소멸위험지수(Local Extinction Risk Index: LERI)에 원인변수인 청년인구비율(Youth Population Ratio to Total Population: YPRT), 청년실업률(Youth Unemployment Rate: YUR),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Youth Policy Budget per Capita: YPBC), 청년정책수(Number of Youth Policy Program: NYPP), 청년혼인률(Youth Marriage Rate: YMR), 청년인구순유입률(Net Inflow Rate of Youth Population: NIPYP)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LERI = YPRT + YUR + YPBC + NYPP + YMR + NIPYP$$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17개 광역자치단체별의 각 변수별 원점수 및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우선 결과변수에 해당되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이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전반적으로 소멸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과 경북, 강원, 전북은 소멸위험지수가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소멸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위험지수의 전체 평균은 약 0.57로 소멸위험 기준에 따르면 '소멸주의'에 해당되지만, '소멸위험보통' 단계에 해당되는 1.0보다는 '소멸위험진입'에 해당되는 0.5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소멸위험 진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의 경우 평균 약 18.2%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약 23.5%였으며, 대전과 광주 순으로 높은 청년인구비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전남은 약 15.2%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기록하였으며, 경북도 유사한 수준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체 평균은 5.3%이며, 강원이 1.8%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의 청년실업률은 9.5%로 무려 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이시균 외, 2008), 본 연구과 연관하여 살펴본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청년들의 경우 기업의 선호인력과 구직자의 기대 수준 간 괴리로 인해 취업준비자와 졸업연기 등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약 583천 원 수준의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은 약 984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낮은 수준인 경기의 169천 원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정책사업은 평균적으로 약 87개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과 충북도 120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강원은 45개로 경북의 약 30% 불과하였으며, 전체 평균 사업수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혼인율은 대부분의 지역이 20% 초중반의 혼인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약 23.7%로 나타났다. 세종이 30.5%로 청년혼인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인구순유입률은 평균 −0.98로, 평균값으로만 본다면 청년인구의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세종과 서울, 인천 등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만 청년인구의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지역은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과 경남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변수의 원점수 현황 및 기술통계

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수 (LERI)	청년인구비율 (총인구 대비) (YPRT)	청년 실업률(%) (YUR)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원) (YPBC)	청년정책 사업수(개) (NYPP)	청년 혼인율(%) (YMR)	청년인구 순유입률(%) (NIPYP)
서울	0.79111	0.23469	4.7	396,477	57	21.2	1.58
부산	0.47480	0.18142	5.1	525,255	98	20.8	-1.00
대구	0.53676	0.18616	8.2	383,271	76	23.6	-1.58
인천	0.71101	0.19941	5.2	208,321	82	23.5	1.30
광주	0.70644	0.20596	6.2	887,799	86	22.4	-1.93
대전	0.71536	0.21619	5.1	629,590	66	22.0	0.22
울산	0.60750	0.17977	9.5	601,097	80	26.2	-1.45
세종	1.07936	0.17579	3.6	591,113	75	30.5	1.85
경기	0.75600	0.20085	4.4	169,296	54	23.7	0.62
충북	0.47471	0.18104	4.6	331,111	87	25.4	-0.11
충남	0.45277	0.17117	5.2	984,381	123	24.8	0.49
전남	0.32103	0.15159	6.1	737,921	89	24.3	-1.59
경북	0.33540	0.15299	4.3	821,252	152	23.4	-2.95
경남	0.42809	0.15755	3.4	467,766	124	22.4	-5.08
제주	0.56885	0.17382	5.9	794,575	97	23.6	-0.50
강원	0.37661	0.16617	1.8	431,734	45	24.0	-0.71
전북	0.38224	0.16524	7.5	952,161	85	21.8	-5.90
평균	0.57165	0.18234	5.3	583,125	86.8	23.7	-0.98
최대값	1.07936	0.23469	9.5	984,381	152	30.5	1.85
최소값	0.32103	0.15159	1.8	169,296	45	20.8	-5.90
중위값	0.53676	0.17977	5.1	591,113	85	23.6	-0.71
표준편차	0.20105	0.02280	1.8	250,941	26.9	2.3	2.15

2. 퍼지점수 변환 및 진리표 분석결과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은 각 변수의 퍼지점수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각 변수의 원점수를 퍼지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퍼지점수 1과 0 사이의 상대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3개의 고정축(anchor)을 설정하게 되는데(Ragin, 2008), 0.5는 분기점으로서 집합의 소속 여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되며, 0.95는 완전 소속, 0.05는 완전 비소속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완전 소속 및 완전 비소속, 중위값을 분기점으로 하여 고정축을 설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각 변수의 원점수를 연속 퍼지점수로 변환하였다. 이때 중위값을 분기점으로 활용함으로써 평균값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변량을 억제할 수 있으며, 원점수의 표준화 및 퍼지점수의 변환에 있어 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게 된다(김교성·김성욱, 2010; 민기채, 2014; 정해식, 2012).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변환된 각 변수의 퍼지점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의 퍼지 변환 점수

지역	지방소멸 위험지수 (LERI)	청년인구비율 (YPRT)	청년 실업률 (YUR)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 (YPBC)	청년정책 사업수 (NYPP)	청년 혼인율 (YMR)	청년인구 순유입률 (NIPYP)
서울	0.80318	0.95257	0.41008	0.20033	0.10910	0.06956	0.93641
부산	0.29699	0.52245	0.50000	0.38500	0.64155	0.04743	0.45828
대구	0.50000	0.58641	0.89222	0.18570	0.33738	0.50332	0.37698
인천	0.72380	0.74510	0.51704	0.06166	0.44399	0.47328	0.91379
광주	0.71872	0.80701	0.67918	0.90579	0.51119	0.22197	0.33026
대전	0.72858	0.87970	0.50000	0.57286	0.19388	0.16113	0.74908
울산	0.59656	0.50001	0.95257	0.51903	0.40733	0.75295	0.39410
세종	0.95257	0.39557	0.20365	0.50000	0.32082	0.95257	0.95257
경기	0.77068	0.75978	0.34607	0.04743	0.08907	0.51059	0.82675
충북	0.29674	0.51731	0.38828	0.13597	0.52237	0.68210	0.67026
충남	0.23721	0.28584	0.51704	0.95257	0.84573	0.62292	0.80302
전남	0.04743	0.04743	0.66414	0.75397	0.54466	0.58046	0.37556
경북	0.05731	0.05466	0.32579	0.85266	0.95257	0.44473	0.21467
경남	0.18077	0.08587	0.17574	0.29375	0.85148	0.22395	0.07394
제주	0.54423	0.34663	0.63308	0.82522	0.63119	0.50230	0.56273
강원	0.09734	0.19043	0.04743	0.24351	0.04743	0.53870	0.50091
전북	0.10444	0.17564	0.83704	0.94015	0.50000	0.12315	0.04743

〈표 5〉와 같이 퍼지점수를 활용하여 결과변수에 대한 원인변수들의 논리적 결합을 나타낸 진리표(truthtable)를 도출하였다. 진리표는 모든 가능한 인과조건의 조합을 2^k개의 열(row)로 나타내는데 본 연구의 경우 원인변수가 6개이므로 실제 가능한 배열은 64개지만, 여기서는 조합 가능한 모든 배열이 아니라 해당 사례가 존재하는 12개의 배열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결과변수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위해 '사례가 1개 이상 존재하고, 일관성 값이 0.8 이상'[9]인 경우를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은(소멸위험이 낮은) 조합으로 판단하여 1, 그 외의 나머지 배열은 0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7개의 배열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과 대구, 인천, 서울, 광주, 경기, 충북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해당 배열은 모두 청년인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진리표(truthtable)

청년인구비율	청년 실업률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	청년정책 사업수	청년 혼인율	청년인구 순유입률	지방소멸위험지수	raw consist.	해당지역
1	1	1	0	1	0	1	0.991951	울산
1	1	0	0	1	0	1	0.985458	대구

9) Ragin(2008)에 따르면 일관성 값이 0.75 이상일 때, 원인조건(변수)이 결과조건(변수)의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 및 선행연구(양지은, 2023; 이동규 외, 2023; 장은하·홍석호·김헌진, 2021; 전영준·엄태호, 2018)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경우 일관성 값을 0.8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1	1	0	0	0	1	1	0.977229	인천
1	0	0	0	0	1	1	0.951076	서울
1	1	1	1	0	0	1	0.943812	광주
1	0	0	0	1	1	1	0.909082	경기
1	0	0	1	1	1	1	0.907782	충북
0	1	1	1	1	1	0	0.761956	충남, 제주
0	1	1	1	1	0	0	0.750557	전남
0	0	0	0	1	1	0	0.74537	강원
0	0	1	1	0	0	0	0.668241	경북
0	0	0	1	0	0	0	0.645363	경남

3. 필요조건 및 충분조건 검증

결과집합 Y가 원인집합 X의 하위집합(subset)이 되는 경우 해당 원인집합 X는 결과집합 Y의 필요조건이 되는데, 이때 원인집합의 소속점수는 결과집합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민기채, 2014). 본 연구는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필요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Y-일관성과 함께 N-일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기준(Y-일관성≥.80, P<.05)에 근거하여 Y-일관성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은(소멸위험이 낮은) 결과집합에 소속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의 경우 일관성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였다.

〈표 6〉 필요조건에 대한 Y-일관성 검증결과

	검증기준(Y-con≥.80(기준값), P<.05)				설명력 (coverage)	검증결과
	Y-일관성	기준값 (benchmark)	F	P		
YPRT	0.853	0.800	1.96	0.181	0.852853	Fail
YUR	0.647	0.800	2.87	0.110	0.647325	Fail
YPBC	0.538	0.800	5.65	0.030	0.538161	Fail
NYPP	0.532	0.800	6.61	0.021	0.531503	Fail
YMR	0.682	0.800	1.36	0.260	0.682304	Fail
NIPYP	0.738	0.800	0.63	0.438	0.737886	Fail

다음으로 필요조건의 N-일관성 검증(Y-일관성≥N-일관성, P<.05)에 의하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은(소멸위험이 낮은) 집합에 소속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해당 지역의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로, 높은 설명력(0.853)[1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 순유입률도 Y-일관성 값이 N-

10) 설명력(coverage)은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agin, 2008; 민기채, 2014; 이은미·윤상오·고기동, 2018).

일관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한 필요조건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조건을 모두 통과한 필요조건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N-일관성 검증결과를 통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즉 소멸위험이 낮은 결과집합에 소속되기 위해 전체 인구에서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7〉 필요조건에 대한 N-일관성 검증결과

	검증기준(Y-con≥N-con, P<.05)				검증결과
	Y-일관성	N-일관성	F	P	
YPRT	0.853	0.564	6.24	0.024	Pass
YUR	0.647	0.712	0.20	0.662	Fail
YPBC	0.538	0.749	1.36	0.260	Fail
NYPP	0.532	0.877	5.95	0.027	Fail
YMR	0.682	0.759	0.16	0.695	Fail
NIPYP	0.738	0.613	0.53	0.478	Fail

한편, 특정한 원인집합 X가 결과집합 Y의 하위집합(subset)이 될 때 원인집합 X는 결과집합 Y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조건은 결과집합의 소속점수에 비해 원인집합의 소속점수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민기채, 2014; 전영준·엄태호, 2018).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한 충분조건 검증에서도 앞선 필요조건 검증과 마찬가지로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일관성 검증기준과 유의수준도 각각 0.8과 0.05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Y-일관성과 N-일관성 검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원인집합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의 최적사례(bestfit)가 존재하는 경우를 결합집합에 대한 충분조건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28개의 원인집합이 Y-일관성 검증기준을 통과한 가운데, 5개의 집합에서만 최적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N-일관성 검증에서는 5개 집합 가운데 1개의 집합만이 검증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인천시가 해당 집합의 최적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충분조건에 대한 검증결과

	benchmark≥.80, P<.05				Y-con≥N-con, P<.05			사례수
	Y-일관성	기준값 (benchmark)	F	P	N-일관성	F	P	
ABdefG	0.977	0.800	109.53	0.000	0.800	4.80	0.044	1

해당 원인집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A), 2) 청년실업률은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B), 3) 1인당 청년정책예산 규모가 작고(d), 4) 청년정책 사업수도 적으며(e), 5) 청년혼인율도 낮게 나타나지만(f), 6) 청년인구의 순유입률은 높은(G) 지

역의 경우,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높게, 즉 소멸위험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정책적 노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청년인구의 순유입으로 인해 지역의 청년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청년실업과 낮은 혼인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나, 지방소멸의 위험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는 충분조건에 대한 원인집합의 축약결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르면 일관성 및 설명력은 각각 0.977과 0.463으로, 원인집합의 소속점수보다 결과집합의 소속점수가 높은 사례로 인해 일관성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민기채, 2014).

〈표 9〉 충분조건의 원인집합 축약결과

원인집합	설명력 (Coverage)	일관성 (Consistency)
YPRT*YUR*ypbc*nypp*ymr*NIPYP	0.463	0.977

4. 분석결과의 정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청년인구의 비율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의 원인집합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변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역의 청년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소멸 문제에 있어 청년인구의 이탈·유출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청년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다수의 논의들(김준영, 2019; 박진경·김도형, 2020; 이상림 외, 2018; 이석환, 2024; 임소현 외, 2024; 임태경, 202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충분조건에 대한 검증결과로 나타난 원인집합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인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1인당 청년정책예산 규모가 작고, 청년정책 사업수도 적으며, 청년혼인율도 낮게 나타나지만, 청년인구의 순유입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소멸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 수준이 낮을수록 지방소멸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적 역량 이상의 과도한 예산 투입이나 다양한 사업 추진보다는 정부의 역량 및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노력이 지방소멸위험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퍼지점수를 통한 비교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퍼지점수가 분기점(0.5) 미만[11]인 지역이 대체로 청년정책예산과 청년정책사업수의 퍼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퍼지점수가 분기점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실업률이 낮은 지역, 즉 고용상황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지방소멸위험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지방소멸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조건의 원인집합을 구성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과를 해석해 본다면, 고용상황이 좋은 지역으로 청년인구가 유입되면서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한정된 일자리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실업률의 경우 구직의 적극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구직활동이 활발할수록 실업률은 높아질 수 있으며,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소멸위험이 낮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적 여건이 양호하여 인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부족한 일자리와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낮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낮은 청년혼인율이 충분조건의 원인집합을 구성한다는 사실 역시 앞선 원인변수들과 유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청년혼인율은 20세~39세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로 측정되는데, 소멸위험이 낮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가 다수 유입되면서 청년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혼인건수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아 혼인율이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 매년 평균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추세[12]에 있으며, 국가 전체적인 조혼인율도 감소 추세[13]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인구의 순유입률은 충분조건의 원인집합을 구성하는 또 다른 변수인 청년인구의 비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순유입률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 비중도 높아지게 되고 이는 지방소멸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방소멸의 핵심요인인 지역인구감소가 청년인구의 유출에 영향을 받는다는 박진경·김도형(2020) 및 임태경(2022)의 연구내용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충분조건의 원인집합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변수들 간의 인과적 선후관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인과적 복잡성(causal complexity) 하에서 각각의 조건들이 어떤 다른 조건들과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지역의 소멸위험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지금 한국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제21대

12) ‘24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20년 전인 ’04년 남성 30.53세, 여성 27.52세에 비해 3세 이상 증가하였다.

13) ‘22년 3.7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조혼인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3년 3.8, ‘24년 4.4로 다소간 반등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이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그간 입법과 행정 영역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험에 처한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청년 관점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접근한 연구가 충분하다고 보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지역의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들간의 결합적 인과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인변수로 청년인구비율, 청년실업률, 청년 1인당 청년정책예산, 청년정책수, 청년혼인률, 청년인구순유입률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결과변수인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대한 필요조건 및 충분조건 결합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필요조건은 지역의 청년인구비율로 나타났으며, 충분조건을 구성하는 원인집합은 높은 수준의 청년인구비중 및 청년실업률, 청년인구 순유입률, 낮은 수준의 1인당 청년정책예산 규모 및 청년정책 사업수, 청년혼인율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위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의 청년인구 비중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의 원인집합을 구성하는 주요 원인변수이며, 청년인구 순유입도 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집합의 구성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년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청년인구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를 통해 청년인구의 유입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다수의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14]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1인당 청년정책예산 규모 및 청년정책 사업수가 적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지방소멸위험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인구의 이탈로 인해 지방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양적 규모에 치중하여 적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정책수요에 기반한 사업보다는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강유미,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청년정책의 경우 각 분야별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로 대표과제를 제출토록 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전에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청년정책 제안서 검토 단계를 내실화하거나, 개별 사업의 성과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경우 관련 부처 및 청년정책위원회에 의해 제안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14)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한 황광훈·조용운(2024)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인구의 유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및 전문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업평가의 경우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되,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고 대표과제의 경우 성과지표 등을 설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업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소멸위험이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낮은 소멸위험의 충분조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멸위험이 낮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적 여건과 일자리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청년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일자리로 인해 이들이 모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실업률이 높게 측정되었을 수 있다. 반면, 소멸위험이 높은 지역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구직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충분한 일자리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의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적극적 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클러스터와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중심으로 인력 및 역량을 집중하여 특성화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위험의 극복에 있어 청년인구의 혼인과 출산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 증가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현재 청년정책의 경우 일자리, 복지·문화, 주거,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각 분야에 혼인과 출산 관련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때 의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에 혼인·출산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정책을 보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들간의 결합적 인과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사회현상의 복잡·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 주거비용, 의료 및 문화시설 등이 청년인구의 정주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소멸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변수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연구에 활용한 데이터 측면에서 변수의 측정 시기를 2024년 3분기로 한정함으로써 변수들간의 인과적 선후관계나 시계열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방소멸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증가한 것인지,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험이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계열 혹은 종단적 데이터 등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을 광역자치단체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적 특성과 그에 따른 소멸위험의 차이 등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보다 엄밀한 연구설계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감사원. (2021).「감사 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서울: 감사원.

강유미. (2022).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지향이 청년 이동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논총」, 25: 25-53.

고문익·김걸. (2021).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에 대한 설명인자 연구.「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1): 17-27.

고윤숙·이영민. (2024).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 예산 결정요인 분석.「사회과학연구」, 35(4): 173-195.

관계부처 합동. (2024).「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구형수·김태환·이승욱·민범식. (2016).「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김경근·이현우. (2017).「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김규환·박인권. (2018).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역혁신의 유형 및 요인 분석.「지역연구」, 34(4): 3-18.

김대성·신동훈. (2016).「지방소멸 가능성에 따른 지역공공서비스 개선방안: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김동신·허성욱. (2023). 지역 청년층 및 장년층의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한국지방자치연구」, 24(4): 102-121.

김민석·강민규. (2023). 개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비수도권 청년유출 영향 요인 분석.「도시행정학보」, 36(2): 47-66.

김정식·임예린·허형조. (202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 방안에 대한 연구: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지방정치학회보」, 13(2): 25-47.

김준영. (2019). 비수도권 청년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변화.「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호.

김현호·박진경. (2019).「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김현호·이제연·김도형. (2021).「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김화연·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 -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리우용샹·김성환·정혜민. (2024). 지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에 따른 취업자의 지역 이동 특

성 연구.「경영연구」, 39(1): 85-104.
마스다 히로야. (2015).「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김정환 역)」. 서울: 와이즈베리.
마스다 외. (2014).「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 일본창성회의 보고서.
민기채. (2014).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사회과학적 활용: Stata를 활용한 Y-검증과 N-검증을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 44: 223-259.
박병식·이동기. (2023). 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 대응 전략.「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3(2): 811-837.
박상헌·노승만·황규선·조명호·권오영·최원실. (2017).「강원도 인구구조 분석과 지역소멸 대응 방안」. 강원연구원 연구보고서.
박승규·이제연. (20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박정태·윤지혜·고길곤. (2024). 20·30대 여성의 전출 사유는 지방소멸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5(3): 1-26.
박진경·김도형. (2020).「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박진경·김현호·김상민·임태경. (2019).「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배선학. (2022).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가 음식점의 개·폐업에 미치는 영향 –강원도를 사례로-.「경관과 지리」, 32(4): 27-38.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2024).「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서인석·이유현·주희진. (202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한 퍼지셋 결합원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30(3): 147-184.
성연주. (2022). 지역문화역량 개념으로 접근한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문화 수준 측정 및 유형화.「지역과 문화」, 9(1); 43-69.
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 (2024).「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신호철·오창석·정경훈. (2023). 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계량모형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4): 133-160.
유한별·탁근주·문정승. (2021). 한국 지방소멸 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탐색.「지방정부연구」, 24(4): 443-476.
윤복상·김걸. (2022). 충청북도 소멸위험의 공간분포와 실태 연구.「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3): 55-65.
윤정미. (2024). 지방소멸지수와의 비교 연구를 통한 마을소멸지수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농촌계획」, 30(1): 1-13.
이광원. (2023).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지방소멸 요인이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순이동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책과학학회보」, 27(3): 131-155.
이명애. (2023). 지방소멸이 지역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인문사회과학연구」, 24(1): 595-615.
이민주·김슬기·김의준. (2023).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도시연구」, 23: 93-137.
이상림·이지혜·Bernhard Koppen·임소정·성백선. (2018).「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경제연구」, 37(1): 43-66.
이상호. (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지역고용동향브리프」, 봄호, 3-17.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지역고용동향브리프」, 7: 2-21.
이상호·이나경. (2023). 지방소멸위험 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지역산업과 고용」, 7: 112-119.
이석환. (2024). 지방소멸의 원인: 인구이동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한국정책과학학회보」, 28(1): 105-131.
이승윤. (2014).「퍼지셋 질적 비교연구 방법론의 이론과 적용: Fs/QCA 입문」.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이승윤·강민아·정무권. (2015).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으로서의 '정부의 질': 퍼지셋 질적비교 연구를 활용한 OECD국가 비교연구.「정부학연구」, 21(1): 1-40.
이시균·박진희·양수경. (2008).「실업, 비경제활동인구 현황분석 및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이은미·윤상오·고기동. (2018). 정책연구의 과학적 방법론 논의: 집합이론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3): 341-361.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지방정부연구」, 24(2): 57-86.
이찬영·문제철. (2016). 광주·전남지역의 연령별·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이찬영·이흥후. (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경제연구」, 34(4): 143-169.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이태호·엄태호. (2022). 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험수준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149-180.
임서현·홍성진. (2019).「소멸위기 지방도시의 지역 유형별 이동권 확보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임소현·장우윤·이태천. (2024).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이 청년인구 유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 -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33(3): 127-163.
임태경. (2022).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출구조가 청년인구 순유입에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 - 경제개발비·사회복지비·일반행정비 세출액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9(3): 1-24.

장은하·홍석호·김헌진. (2021). 17개 시·도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한국노년학」, 41(1): 127-147.

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024).「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영준·엄태호. (2018).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수입확충 노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전국 시·군 지자체에 대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중심으로-.「한국자치행정학보」, 32(4): 261-290.

정민수·김의정·이현서·홍성주·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BOK이슈노트」, 제 2023-29호.

정성호·홍창수. (2018). 강원 지역의 소멸 가능성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연구」, 57(1): 3-25.

정성호. (2019).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가능성.「사회과학연구」, 58(1): 3-22.

정영철. (2024).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본 지방소멸대응의 과제 - 제도적 보장론과 규범적 근거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74: 121-158.

조임곤. (2020).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월간국토」, 460: 37-42.

차건환·임수하. (2023). 비수도권 소도시의 인구변화 분석 및 지역활력지수의 산정.「국토지리학회지」, 57(2): 111-128.

최선·이정은. (2022). 지방정부 청년정책과 이주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 청년들의 이주요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30(4): 155-180.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 퍼지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정부학 연구」, 15(3): 307-336.

최예술. (2022).「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하혜영·김예성. (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NARS 입법·정책」, 85호.

한주성. (2018). 과소지역의 한계취락 출현과 지역재생.「대한지리학회지」, 53(3): 327-346.

황광훈·조용운. (2024). 청년패널조사로 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과 유입.「고용동향브리프」, 2024(4): 30-38.

허문구 외. (2022).「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보고서.

허웅호·이창수·김찬호. (2024).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국토연구」, 121: 73-90.

홍기석·윤태영. (2019).「부산지역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Bennett, A., & Elman, C. (2006). Complex causal relations and case study methods: The example of path dependence. Political analysis, 14(3): 250-267.

Elis, V. (2008). The Impact of the Ageing Society on Regional Economie., The Demographic Challenge: A handbook about japan, pp. 861-878, Brill.

Fu, Y. and Gabriel, S. A. (2012). Labor Migration, Human Capital Agglomer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China.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42: 473-484.

Harris, J, R. and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 126-142.

Hollander, J., Pallagst, K., Schwarz, T. and Popper, F. (2009). Planning Shrinking Cities. Progress in Planning. 72(4): 223-232.

Kvist, J.(2007).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474-481.

Lee, E. S. (199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Longest, K. C. and Vaisey, S. (2008). fuzzy: A program for perform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es (QCA) in Stata. Stata Journal, 8(1): 79-104.

Pallagst, K., Wiechmann, T., and Martinez-Fernandez, C. Eds. (2013). Shrinking cit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Routledge.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agin, C. C. (2008). Redesigning social inquiry: Fuzzy sets and beyond.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Ti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416-424.

Todaro, M. (1981).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New York: Longman Inc.

Wiechmann, T. and Wolff, M. (2013). Urban Shrinkage in a Spatial Perspective - Operationalization of Shrinking Cities in Europe 1990-2010. AESOP-ACSP Joint Congress.

백종선(白種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전공 박사수료. 현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학문적 관심 분야는 성과제도, 재정정책, 지방재정 등이다. 최근 발표 논문으로는 Q방법론을 활용한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주체의 인식유형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동산 정책 인식 연구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chronic0527@gmail.com)

〈논문접수일: 2025. 7. 11 / 심사개시일: 2025. 7. 13 / 심사완료일: 2025. 8. 27〉

Abstract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Local Extinction Risk in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Youth: Focusing on Fuzzy Set Analysis

Paik, Jongsun

This study applies the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method to examine the configuration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influencing the risk of regional extinction across Korea's 17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young people. Based on the findings, it further seek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addressing the issue of local extinc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constitute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gional extinction risk. The sufficient causal configurations include a high level of youth population proportion, youth unemployment, and net youth inflow, in combination with a low level of per capita youth policy budget, a smaller number of youth policy programs, and the youth marriage rate.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continuous efforts to expand the demographic share of young people in local regions, accompanied by systematic evalua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youth-related policie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policy initiatives should focus on securing quality employment opportunities that encourage activ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mong young peopl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marriage and childbirth dimensions into youth policy frameworks and to develop explicit standards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programs.

Key Words: local extinction, local extinction risk index, youth, fuzzy-set, local government